

통일 칼럼

### 北 김정은의 진짜 비밀 금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심각하다. 그런데 미사일과 핵 개발 비용, 해외 고가품과 외제차 등 김정은 일가의 사치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비자금이다. 그동안 당 39호실이 조달하는 창구로 알려졌었는데, 진짜 비밀금고는 국무위 36국이 별도로 관리한다.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라 불렸던 핵심간부의 사위이자 북한 외교관 출신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다.

고가의 해외 명품 옷과 가방,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 최고급 방탄 차량과 호화 요트에 개인용 백까지 지,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의 호화로운 사생활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런 사치와 풍요는 김 위원장만을 위한 비자금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19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류현우는 북한 외무성에서 20년 넘게 몸담은 베테랑 외교관이자, 정일출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정복규  
논설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비자금 관리처를 폭로한 바 있다. 오직 김 위원장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무위원회 36국'이다.

그동안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북한 노동당 산하 '39호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39호실은 주요 금융기관과 알짜 기업을 소유해 외화벌이를 주도하며 노동당 통치 자금과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창구로 여겨왔다.

하지만 진짜 비밀 금고는 어떠한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는 성역 중의 성역인 바로 '36국'에 있다. 39호실 비자금은 어느 정도 예산 통제를 받지만, 36국 비자금은 아무런 간섭

없이 지출이 이뤄진다.

36국이 한 번에 집행하는 자금 규모는 팔개는 수백, 수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생겨나 어디에 은닉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실체와 총 규모를 온전하게 알고 있는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뿐이다.

김씨 일가가 천문화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축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인 독재 체제를 대를 이어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비자금은 자신들을 위한 해외 사치품 구입 용도와 함께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을 사기 위한 선물 정치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우상화 작업과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도 비자금을 투입한다. 36국의 비자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은밀한 돈이 북한이 그토록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경로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일가의 은밀한 비자금인 만큼 관리하는 전담인력 또한 철저히 배일에 싸여 있다.

외부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조차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 때마다 공식 수행원 명단에는 없지만 결을 지키던 인물이 있었다.

그가 바로 비밀 금고의 열쇠를 쥔 인물, 강용철 36국 국장이다. 경제 외교관이라 불리는 일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해킹과 IT 위장 취업 같은 사이버범죄까지 동원해 해외의 막대한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 그런데 핵 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비자금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기고문

### 헌법 제21조의 완성,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다. 집회와 시위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수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필수적인 소통 기제다.

집회의 양상이 과거의 물리적 충돌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제 형식의 평화적 퍼포먼스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소음 문제, 교통 불편, 공권력과의 마찰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공권력(경찰)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먼저, 참여자의 '평화적 집회'를 위한 책임감이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

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의 판례들은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비폭력 원칙을 고수하고 '질서유지인'은 돌발적인 폭력 상황을 방지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된 경로와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안전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확성기 소음을 법적 기준 내로 유지하려는 노력, 집회 후 현장 정돈과 같은 작은 배려들이 모여 집회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경찰의 역할은 '통제'에서 '조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



구준모  
무주경찰서  
경비정보인보과  
경위

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행정 작용은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찰은 집회 권익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집회 참여자들을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

는 한,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적인 강제조치보다는 설득과 안내를 우선해야 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

갈등 중재 전문가인 대화경찰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은 단순히 재중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 측과 불만 측이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집회 참여자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평화적 절차를 준수하고, 경찰이 이를 민주적으로 뒷받침할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은 파괴가 아닌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헌법 제21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성숙한 민주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평균 연봉 5000만원 시대

지난해 국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수준이 처음으로 평균 5,000만원을 넘어섰다. 평균 5,061만원으로 전년보다 2.9% 상승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연 임금 총액은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정액·특별급여)을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정액 급여 인상률이 2.7%로 전년(3.2%)보다 낮아졌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이 4.3%로 전년(0.4%)에 비해 크게 높아지며 전체 임금 상승을 이끌었다.

2020년과 비교한 지난해 연 임금 총액은 19.9% 인상됐다. 특별급여 인상은 28.3%로 정액 급여 인상은 18.7%보다 9.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 총액은 7,399만원

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4천 538만원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9천 387만원(5.9% ↑)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은 3,175만원(3% ↑)으로 가장 낮았다.

전기·가스·증기업(9,103만원·2.6% ↑), 전문·과학·기술업(6,873만원·2.4% ↑), 정보통신업(6,384만원·2.7% ↑)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상용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2011년 1만5,483원에서 지난해 2만7,518원으로 77.7% 올라 같은 기간 연 임금 총액 인상률(58.9%)보다 높은 누적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

최근 울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미 포착됐고 도움을 기회도 있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사망자는 30대 아빠와 만 7살, 5살, 2살, 그리고 5개월 첫막이였다. 아이들의 엄마는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이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던 30대 가정은 5개월 아기를 홀로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고, 개학 후 나를 동안 결석했을 땐 경찰 신고까지 접수됐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 확대집단 공무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폭행 등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자체 복지 지원 서비스와 연계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생활 지원금 등을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이 가정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식료품을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아이들의 아빠가 기초생활수급 등을 지원 받기 위한 행정적 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현물 급여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동의가 없었던 것 같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위기 장후가 포착됐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끝내 한 가족의 비극을 막진 못했다. 복지행정의 사각지대 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

